"주택 공급 책임지고 집행"

김윤덕 국토부장관 "장관 직접 진행이 원칙… 정부 대책 강화 노력 실제화 힘쓸것"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9일 11월부터 주 2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주택 공급에 대해 샅샅이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주문하자 "주택 공급 집행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대책을 노력하겠다"면서 정비사업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운영, 3기 신도시 조기 진행 등을 열거한 뒤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진행할 생각"이라며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에 관한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좀 더 체계적인 조직도 확대할 생각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최소한 국토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공급에 관한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황운하 의원 질문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 처지가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공공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30일 서울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유세프 모하메드 알호르 카타르 글로벌탄소위원회(GCC · Global Carbon Council) 의장과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카타르 GCC 의장과 탄소중립 협력 논의

김관영 지사, 새만금 RE100 산단 등 친환경 정책 공유

GCC,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희망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30일 중앙협력본부에서 유세프 모하메드 알호르 카타르 글로벌탄소위원회(GCC · Global Carbon Council) 의장과 면담을 갖고,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 내 협력기관과의 사업 논의를 위해 방한한 GCC 유세프 의장이 한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에 관심을 보이며 마련된 자리로, 전북의 친환경 정책과 글로벌 탄소 감축 협력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카타르 GCC는 글로벌 사우스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탄소시장 및 지속가능 발전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 비영리기구로, 탄소 감축과 상쇄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 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허브화 계획이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있으며, 주요 연구 및 인력양성 인프라가 집약된 만큼 국제 에너지 파트너십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확대와 친환경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유세프 GCC 의장은 "전북은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할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 인상 깊게 봤다"며, "향후 전북도와 협력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GCC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에서 탄소중립을 지원한 기관으로, 전북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방향과 맞닿아 있는 협력 파트너"라며 "GCC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의 친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기반 인프라 조성이 한층 체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오늘 전북자치도 금고 운영 주체 선정한다

도, 투명한 선정 위한 제도적 기초 마련 주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고 지정은 막대한 규모의 도 재정을 관리할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며, 전북도는 투명한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지난 5월, 도 금고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며 투명한 금고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쳤다.

이는 그간 다소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금고 운영을 공평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올해 5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에는 차기 금고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 항목이 개선되고 배점 기준이 조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4점)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지역을 위한 자율항목 신설을 통해 지역 재투자 실적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에서는 배점하향 항목으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1점을 없애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점수를 7점에서 5점 으로 하향하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점수도 7점에서 6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과거에는 농협과 전북은행 두 곳만 금고를 운영에 참가했으나,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측에서 제안 설명회에 담당자가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탐색에만 그치고 우리은행은 도금고 선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금고 운영 주체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는 높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도의 보안 속에서 구성된다. 심의위원은 총 12명으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위원들은 의회와 전문가 집단(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채워진다.

특히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서 5배수를 추천받고, 오늘(31일) 아침 9시에 양쪽 금융기관에서 추첨할 사람이 직접 참여하여 심사위원을 최종적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추첨된 위원은 비밀 유지를 위해 심의 시작 전까지 외부 노출 없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만약 선정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12명에 못 미치는 11명이나 10명이 될 수도 있는 상태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면 끝이 난다.

도금고에 지정되고자 신청한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10분 내외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2점), 주민 이용 편의성(22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22점),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 사업(7점) 및 지역 재투자 실적(2점)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 특히 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는 관내 지점 및 ATM 설치 대수뿐만 아니라,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납부 편의 증진 방안 등도 포함되어 주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 중시된다.

도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전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할 역량 있는 금융기관을 선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도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도 금고 운영의 새 주체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생활체육 · 엘리트체육 분야 안건 제시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체육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함과 동시에,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며 체육인 복지 전반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투자 확대' 등의 체육인 복지 과제는 임금 체계 개선이나 성과 포상금 조정과 같이 체육인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대사회에서 생활 · 엘리트체육이 국민 삶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과 체육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동구 도의원, 2년 연속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정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와 함께하는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치 · 행정 · 사회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본예산 심사 대비 신규사업 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30일 부안군 현지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소관 실 · 국장으로부터 2026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도민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심도 있게 점검하고, 낭비성이나 과도한 예산은 단호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영태 남원시의장,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정책자문위원에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시킨 상설 조직으로,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지원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김영태 의장은 "지방정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힘임을 깊게 새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지난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59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남군산역 신설이 포함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시정 질문도 이어졌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이후 군산시의 대응 부재 및 기반시설 대응 전략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도 올해 침수피해에 따른 군산시의 미흡한 침수 대비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공공기관 출연금 · 전출금 · 위탁사업비 정산 제도 마련

김성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출연금과 전출금, 그리고 위탁사업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윤수봉 도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돼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는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돼 전국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이만호 기자